<창초경제 비젼과 실행 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연총회장 오 영 제

2013.6.14.대덕포럼 패널

(이상목 미래부1차관 발표)

금번 국회 추경으로 국가채무가(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 48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GDP대비 36.2%) 10년 전인 2003년의 국가채무 165조 8000억의 3배 수준이며 현재 주변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경제전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힘을 합칠 때 이지만(과학기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 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 '벤처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 발표는 여러 경제 단체 및 협회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포괄적으로 그 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창조경제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이들의 주체가 과학기술자가 될 지언데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발표내용이 '작전'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투할 병력(즉, 과학기술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궁국적으로는 이들의 사기가 크게 뒷받침 되어야 올바른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DJ정부에서의 '벤처버블'과 '이공계 기피현상' 및 MB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한계'등을 반면교사로 해야 할 것이다.

(1) 창조경제 추진전략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콘트롤타워」구축에 대한 의향과 또 연구 개발행정 과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평의원회(Senator)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는 다른 것임) 보조 자문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2) 창조경제를 통한 5대 변화를 적시하셨는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각 추진분야 마다의-Action Plan-구체적 실천방안-정책, 제도/문화 등을 상세히 도출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데에 대한 상세 로드맵과

(3)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 보면 "부처 간 협업장려" 및 "빅데이터 활용"을 제시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정부는 현장과 「소통」을 위한 통통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요즈음 미래부의 일하는 방식도 예전과 달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에까지 국정 철학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로서, 창조경제 민관협의체에는 정부와 민간경제 단체로 만 구성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총이나 연총, 여과총 등 다수의 과학기술단체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